

■ 여야 '4대강 예산' 힘겨루기 본격화

# “강행처리도 불사” “공사중지 가처분”

원내대표회담 난망... 연말 물리적 충돌 우려

“27일까지 상임위 처리” “날치기 저지할 것”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갈수록 격화되면서 예산 국회 파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조만간 다시 만나 예산안 심의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이견이 크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연말 예산국회가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로 얼룩지지 않느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3일 4대강 예산을 비롯한 새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전날 영산강 구간에서 열린 4대강 사업 기공식에 민주당 소속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참석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압박했다.

정몽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추진 사업으로만 보지 말고 국가 장래를 위한 우리 시대의 사업으로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27일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예산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방침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말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심사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건의하겠다”면서 “30일부터는 예정위를 본격 가동해 내달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재철 국회 예정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예산안 강행 처리 가능성에 대해 “예산심을 거부하는 야당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물리다 물리다 그렇게 (강행 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장광근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호남 이강집’ 발언을 하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단체장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국가와 호남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고 지역감정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조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관련 예산의 대쪽



한나라당 정몽준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4대강 공사 저지 전국여성총결기대회'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안희정 최고위원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정몽준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4대강 공사 저지 전국여성총결기대회'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안희정 최고위원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감을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 의에서는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4대강 공사의 착공과 이로 인한 환경 파괴, 재정적자 등을 우려하면서 사업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지 않았는데 왜 기공식을 대대적으로 하느냐”고 비판했으며 이강래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꼭 실현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예산안의 구체적인 자료를 국회에 추가로 제출하기 전까지 국토해양부, 환경노동부 등의 관련 상임위에서의 예산안 심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예정특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공공부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제

출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성의를 보여야 예산심사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수질개선 등의 하천정비 사업을 위해 4대강 예산을 1조원 이내로 줄이되, 대운하의 전초 단계로 의심되는 보와 준설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동교동-상도동 화합 모임 잇따라

동교동계와 상도동계의 화합 모임이 잇따라 열린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측근그룹인 동교동계의 대변인격인 장성민 전 의원은 23일 “상도동계 핵심인사인 김덕룡 대통령국민통합특보와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오는 25일 동교동계 국립현충원에서 열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0일 추모기도회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민주화, 반독재 투쟁을 함께했던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인사들이 DJ 서거를 계기로 이뤄진 민주화세력의

상도동 핵심 DJ 추모기도회 참석 정치적 화해와 화합을 더욱 공고화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밝혔다.

26일 YS 주재 만찬 회동 계획도

DJ측에선 부인 이희호 여사와 차남 김홍업 전 의원 가족을 포함해 권노갑 한화갑 김옥두 이훈평 최재승 윤철상 장성민 전 의원 등 동교동계 핵심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추모기도회 다음날인 오는 26일엔 김영삼 전 대통령(YS)이 주재하는 동교동계-상도동계 만찬 회동이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만찬은 DJ 서거 직후인 지난 8월26일 잡혔다가 “상중(喪中) 만찬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동교동계 내 의견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만찬 회동에는 1980년대 YS와 DJ의 양대 계파가 함께 구성했던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 출신 인사 8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의원 정수·선거구 조정 착수

### ‘금품수수 50배 과태료 룰’ 정비도

#### 국회 정개특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공직선거법 소위원회회를 열고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착수했다.

정개특위는 우선 인구편차를 감안하지 않은 시·군·구의 선거구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선거구별로 시·도 의원 수 2명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선거구 인구가 선거구가 속한 시·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에 비해 많거나 적을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와 함께 현재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한나라당은 기초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지만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로 전환될 경우 야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워진다고 소선거구제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은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50배 룰’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관련 조항도 정비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회폭력’ 문학진의원

##### 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23일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서기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

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는 벌금 50만원을, 민주당 당직자 6명에게는 벌금 4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민주 ‘영산강 엇박자’ 책임 논란

광역 단체장 기공식 참석 놓고 비판 목소리

지도부 “대여투쟁 도움 안돼” 조기 봉합 시도

민주당이 정국 최대 현안인 4대강 사업과 관련, 엇박자가 표출되면서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22일 영산강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호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는데도 불구하고, 당 소속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행사에 참석하면서 일어났다.

일단 당내에는 두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당의 운명을 걸고 4대강 사업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세균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은 당의 당론이나 당의 입장을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벼운 경고를 보냈다.

물론 당 지도부는 이 같은 당내 논란이 대여 투쟁의 전열을 흐트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여권에 책임을 돌리고 봉합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원의 참석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몹시 부적

절했으며 분열을 책동하는 듯한 발언은 품격을 의심스럽게 했다”며 “영산강이 치수사업이 50%에도 미달한 수준이라 지역의 단체장들이 사업을 잘해보고자 하는 의욕은 있을 것이다. 시장이나 도지사는 당연히 (기공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주선 최고위원도 “행정단체장이 수반인 대통령 주관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영산강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복원되고 생태계가 보전되는 것이라면 하루빨리 공사에 착공해야 한다고 즐기게 주장해왔다”며 “지금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한 반도 대운하 사업의 전초 사업이고 그 자체가 여한반도에 대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당내에서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 부분에 대해 4대강 사업과 분리 대응하지 못하고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을 난처하게 한 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에 대한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마무리도 전략이다! 막판 뒤집기! "김영" - www.kimyong.co.kr

# 상위권 대학편입 D-day 40일 합격완성

# "FINAL 총정리" (12월1일 집중강좌)

실력있는 학원은 합격자로 말한다!  
10명중 7명이 김영출신 합격자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고개  
동일한 강재 동일한 시스템

★ 기출문제는 물론, 예상문제를 통해 고난이도까지 정복한다. ★

2009년 편입 김영출신 합격자  
일반편입 현재까지 5,849명  
수학전형 현재까지 1,450명

철저한 담임제도  
1:1 철의 상담  
일일출석점검

무료특강  
무료특강

시사특해  
기초문법

개강  
12월1일

2010 편입영어 실전대강좌  
- 편입영어 문법정리, 어원학습,  
- 특히 유형별 접근법 학습

편입영어  
이론+확장개강

우리나라에서 대학편입을  
가장 많이 시키는 곳!

#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 222-8088  
실시간 문자상담 / 010-7766-1254